

츠치야 유카, 『문화냉전과 과학기술--미국의 대외정보 프로그램과 아시아』 (교
토대학출판회, 2021). 341쪽 [土屋由香, 『文化冷戦と科
学技術—アメリカの対外情報プログラムとアジア』 (京都大
学学術出版会, 2021).]

고바야시 소메이 (小林聡明)[†]

1. 동경의 미국, 개인적 경험으로서의 집단적 경험

나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현대사 연구자이다. 하지만, 원래는 우주 비행사가 되려고 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는 미국 항공 우주국(NASA)에 편지를 써 우주비행사가 되기 위한 조건과 자격 등에 대해 문의했다. 자세한 주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NASA Headquarters, Washington DC, USA로밖에 주소를 기재할 수 없었고, 그대로 발송했다. NASA에 도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주 후 우편함에는 편지 크기의 우편물이 들어 있었다. NASA로부터 온 답장이었다. 거기에는 우주왕복선 스티커 등의 기념품과 미션리스트 등 우주개발 관련 자료와 함께 우주비행사가 되기 위한 조건과 자격을 설명한 편지까지 동봉되어 있었다. 편지에는 우주비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꼭 응모해 주었으면 하는 격려의 메시지도 쓰여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NASA로부터 온 답장은 우주비행사를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인 나에게 꿈의 실현을 향한 큰 격려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귀중한 경험을 주었다. 케이프 커내버럴(Cape Canaveral)에서 붉은 불길을 내뿜으며 발사되는 우주왕복선의 모습은 우주개발을 선도하는 미국의 위대함을 비추어 미국의 선진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동경심을 불러일으켰다. 동시에 한 명의 고등학생에 대한 NASA의 친절한 대응도 미국의 위대함을 느끼게 하였고, 미국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 주었다.

[†] 니혼대학 (Nihon University), kobayashi.somei@nihon-u.ac.jp

이러한 나의 경험은 말할 필요도 없이 개인적인 경험이다. 하지만 그것은 지구상의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집단적인 경험”이기도 했다.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문화냉전”에 관한 연구를 시작할 때까지 알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미국 정부만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

냉전기 미국과 소련은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문화”를 둘러싼 경쟁을 펼쳤다. 그것은 “문화냉전”이라 불리며 양쪽 진영이 스스로의 “문화”가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전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 그녀들의 마음을 얻어내, 자신의 진영으로 붙들어 매기 위한 싸움이었다. 마음을 얻기 위한 싸움은 영화와 음악, 문학, 예술 등 좁은 의미의 “문화”뿐만 아니라 교육제도와 인프라, 현대적인 생활양식 등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여기에는 과학기술도 포함돼 있었다.

나는 우주왕복선에 표상된 선진적이고 미래적인 미국의 우주개발 기술에 들떠서 우주개발에 종사하는 것을 꿈꿨다. 미국에 대한 동경심을 가졌던 내 개인적 경험은 “문화냉전”을 벌이는 미국이 논의한 결과이며 지구의 곳곳에 존재하면서도 가시화되지 않은 “집단적 경험”이기도 했다. 나의 경험은 냉전 종결 후의 것이었지만, 분명히 “문화냉전”을 벌이는 미국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길러진 것이었다. 비록 냉전이 종결되더라도, 마음을 얻기 위한 싸움은 지금도 전세계에서 계속되고 있고, 그것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보아도 명백하다.

본서는 내 개인적이기도 하고 집단적이기도 했던 경험을 분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은 선진적인 과학기술에 들떴고 그 앞에 펼쳐진 미국을 동경했다. 그것은 문화냉전을 벌이는 미국이 “문화”나 과학기술을 이용해 우리의 마음을 얻어내려 한 전략의, 하나의 귀결이기도 했다. 본서는 냉전기 미국이 스스로의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제시함으로써 어떻게 아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 했는지, 그 전략과 정책에 대해 원자력과 우주, 의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한다. 그것은 과학기술과 정치를 같은 평면상에서 연결하는 “문화냉전”이라는 “그물코”를 가시화함으로써 과학기술이 가진 정치성, 또 문화와 정치(권력)의 상호관계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문화나 과학기술은 정치와 무관하게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필자의 문제의식에 뒷받침되고 있다.

2. 이 책의 전제, 거기에 담긴 의의

본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필자의 약력에 대해 소개해 두고 싶다. 필자는 오사카 외국어 대학(현 오사카 대학 외국어 학부)에서 미국사, 미국 연구를 전공한 후, 미국 메릴랜드 대학 대학원 역사학부에서 GHQ 점령기의 여성 정책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일본 귀국 후, 히로시마 대학 종합 과학부에서 조교를 맡은 후, 다시 폴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미네소타 대학 대학원 미국 연구 학과의 박사 과정에서 공부를 하였고, 대일 점령 정책 내 정보, 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필자는 점령기부터 냉전기에 이르는 시기에 관심을 둔 미국사 연구를 해왔다. 이는 정치사적인 색채가 강하지만, “문화”의 측면을 중시하는 자세는 일관되어 있었다. 이 자세는, 박사학위 취득 후의 연구로 더욱 명확해지고, 필자의 관심은 “문화냉전”을 향해 가게 된다. 그러한 관심을 발전시킨 연구 성과가 본서이며, 필자에게 있어서, 두 권째의 단독 저서, 공편 저서를 포함하면 네 권째의 저작에 해당한다.

본서는 일본어로 쓰여진 것으로, 한국어 번역서는 현시점에서 출판되어 있지 않다(2022년 중에 Routledge로부터 영어판의 간행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 입각하여, 본고에서는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인 독자가 본서의 논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금 자세하게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싶다.

본서에서는 논의를 위한 전제로 몇 가지 개념이 검토되어 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는 “냉전”, “문화”, “해외정보 프로그램”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필자가 본서에 담긴 의의를 명확히 하고, 어떠한 문제의식에서 집필되었는가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첫째, 냉전에 관한 것이다. 냉전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둘러싸고 최근 매우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Odd Arne Westad는 주목할 만한 냉전관을 제시했다. 즉, 냉전이란 미국과 소련의 대립 혹은 그 대리전쟁에 한정된 현상이 아닌,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의 탈식민지화 과정과 동시진행적으로 발생하며, 이 신흥국가들이 대국의 갈등에 휩쓸리면서도 독자적인 길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다. 본서는 베스타의 냉전관을 따르면서, 미소 대립 시기에 발생한 모든 사건들을 “냉전”으로 파악하고 “냉전”에 환원시켜 설명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자세는 다음과 같은

이 책의 과제에 대한 필자의 설명에서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본서는 미·소의 과학기술 개발 경쟁을 배경으로 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냉전”의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을 다루지만, 동시에 그 정책이 향한 상대국 내에서는 냉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발적 사정이 존재한 것에 유의한다.

본서는 미소 대립에만 주목한 연구나 “냉전”으로 환원시켜 설명하는 연구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하는 관점에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둘째, 문화에 관한 것이다. 이 책의 제목에 “문화냉전”이라고 나타나 있듯이, 문화는 책을 관철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문화냉전”은 문화와 냉전을 합친 용어로, 냉전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한 그대로이다. 후자의 문화에 관해 필자는 주로 문화 인류학이나 문화 연구의 영역에서 검토해, 거기에 담긴 권력성이나 음악이나 문학, 영화 등의 좁은 의미의 “문화”에 머무르지 않고 넓은 의미로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관계론이나 국제정치학에서도 “문화”의 개념을 도입한 연구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역사학에서도 “문화”에 주목한 역사 서술이 “새로운 문화사”의 흐름 속에 축적되어 왔지만, “문화냉전”의 연구에 한해서는 문학이나 영화, 음악, 예술이라는 좁은 범위에 집중하고 있고, “문화”의 취급법에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서술 후, 필자는 “과학기술”은 “문화냉전”과 깊은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미개척된 분야이다”라고 지적한다. 나아가 필자는 냉전기의 과학기술이나 학문의 편성에 관한 연구는 “문화냉전”의 연구와는 그다지 접점을 가지지 않고 행해져 왔다고 주장한다. 이를 토대로 본서는 문화인류학, 문화연구, 국제관계론, 국제정치학, 역사학, 과학기술사, 문화냉전사에 부재한 과학기술에 주목함을 선언하고 일반적으로 “냉전”이라 불린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미국에서는 아이젠하워 정권에서 케네디 정권에 해당하는 시기)에 미국 정부가 어떻게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아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려 했느냐는 문제를 설정했다. 본서의 매력은 이러한 복수의 연구 영역을 종합무진으로 연결하여 “문화”로 과학기술을 파악하는 그 독창성과 다이내믹함에 있다.

셋째, 해외정보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이 책은 굳이 “공공 외교”(홍보 외교, Public Diplomacy)를 사용하지 않고 “대외정보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본서의 부제에도 게재되어 있는 대외정보 프로그램은 국무부의 외교

자료집(FRUS)의 표제인 Overseas Information Program의 번역어이다. 필자는 대외정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하나는 “공공 외교”가 1960년대 이후에 등장한 용어로, 본서가 대상으로 하는 1950년대부터 60년대 전반의 미국 외교를 분석하는 데 반드시 적합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공 외교”와 대외정보 프로그램은 각각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다. 대외정보 프로그램은 미국이 “적극적인 자유를 포함한 가치의 옹호자임”을 나타내며 “소련의 위신과 영향력을 저해”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한편 “공공 외교”는 “홍보와 문화교류를 통해 민간과도 연계하며 외국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외교활동”으로, 대외정보 프로그램과는 뉘앙스가 달랐다고 한다. 필자는 본서가 공공 외교에 관한 연구로 읽히는 것에 명확한 선을 긋고 있다. 이것에는 본서가 어디까지나 미국 외교사의 문맥에 입각한 확실한 실증연구임을 나타내는 필자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본서의 실증적인 측면에서의 확실함은 발군이다. 본서에서는 메릴랜드주에 있는 NARA, 시카고에 있는 분관, 나아가 아이젠하워 대통령 도서관이나 미시간 대학 도서관 등에 소장되는 국무부나 NASA, USIA, AEC, USAID 등의 광범위한 미국 측 공문서 외에도, 도쿄에 위치한 외무성 외교사료관의 전후 외교 기록이 분석 사료로 사용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사료를 활용해, 멀티아카이벌(Multi-Archival)한 분석을 시도하여, 1950년대부터 60년대 초에 이르는 미국의 대외정보 프로그램의 동태를 입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3. 본서의 내용

다음으로 본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싶다. 본서는 2부 구성으로 되어있으며, 전자에서는 핵과 원자력에, 후자에서는 의료원조와 우주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하, 본서의 목차이다.

서장

1. 과학기술과 문화냉전
2. 홍보외교, 정보정책 등의 개념정리와 담당기관
3. 「평화를 위한 해외의 원자력(Foreign Atoms for Peace)」
4. 본서의 구성과 각 장의 내용

제I부 문화냉전과 핵 그리고 원자력

제1장 문화냉전과 원자과학자들—「문화자유회의」와 「원자과학자회보」

1. 시카고의 과학자들과 「원자과학자회보」의 창간
2. 문화자유회의와의 만남
3. 라비노비치, 실즈, 문화자유회의, 「원자과학자회보」를 잇는 공통항
4. 「원자과학자회보」에서의 「과학자의 역할」과 「과학의 자유」

제2장 「평화를 위한 해외의 원자력 Foreign Atoms for Peace」와 연구용 원자로의 수출

1. 원자력 기술원조의 배경
2. 남베트남
3. 일본
4. 버마

제3장 원자력 유학생들—아르곤 국제원자력과학기술학교

1. 아르곤 국제원자력과학기술학교(ISNSE) 설립
2. 원자력 「유학생」들의 경험
3. 유학생을 소재로 한 대외정보 프로그램

제4장 태평양의 핵실험을 둘러싼 역설의 대외정보 프로그램

1. 레드wing 작전 개시와 보상 문제
2. 「클린 밤」(깨끗한 폭탄)을 둘러싼 대외정보 프로그램과 그 좌절
3. 하드택 작전과 「다쿠요」, 「사츠마」피폭 사건
4. 핵실험 금지 요구와 배상청구와의 관계
5. 항의선에 관한 정보통제

제 II 부 새로운 대외정보 프로그램의 전개

제5장 「평화를 위한 원자력」에서 「평화를 위한 과학」

1. 스푸트니크 쇼크 후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정부기구 개혁
2. 대외정보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의 새로운 중요성
3. 변혁기 대외정보 프로그램

제6장 「호프 계획」으로 보는 의료원조 정책

1. 문화냉전 무대로서의 의료원조—말라리아 박멸 캠페인을 사례로
2. 의료원조/대외정보 프로그램/민간 자원봉사 활동을 둘러싼 논의
3. 호프 계획의 실시 내용

4. 호프호의 인도네시아 방문
5. 호프호의 남베트남 방문

제7장 새로운 대외정보 프로그램으로서의 우주개발

1. 우주개발과 정보정책
2. NASA와 USIA의 협력
3. USIS 영화와 전시회

결론

제1장은 1950년 6월에 CIA의 자금원조를 받아 파리에서 발족한 “문화자유회의”에 주목한다. 여기에서는 나치 독일의 박해를 피하고 미국으로 망명한 과학자들이 왜 이 회의에 공명하고 반공자유주의 노선을 걷게 됐느냐는 문제가 제기되어 있다. 이 장은 “과학의 자유”와 “반공”의 공진 과정을 살펴보고 과학과 과학자가 문화냉전의 중요한 주체이며,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는 과학이 냉전에 연루되어 있던 양상을 그리는 것으로 이 물음에 응답하고 있다.

제2장은, 미국에서 남베트남, 일본, 버마까지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 사례를 비교 검토하는 것으로, 연구용 원자로나 연구 설비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 “것”이, 문화 냉전에서 어떻게 의미를 가질 수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본 장은 그 “것”이 국가의 위신과 양국 간의 신뢰 관계의 상징이며, 과학자를 해외로부터 귀국시키기 위한 매력적인 디스플레이이며, 또한 소련의 접근을 저지하기 위한 흥정 도구라는 것을 지적하고, 원자력 기술이 대외정보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혀내고 있다.

제3장은 “국제원자력과학기술학교”에 주목한다. 이 학교는 미국 정부가 세계 각국의 젊은 기술자나 과학자들인 “과학 엘리트”에게 원자력 기술을 가르칠 수 있도록 시카고 교외에 있는 아르곤 국립연구소 내에 설립한 교육 시설/프로그램이다. 본 장에서는 “원자력 기술”이 대외정보 프로그램의 테마로서 중요성을 늘려가는 과정과 외국의 “과학 엘리트”가 그 중요한 대상이 되어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제4장은 레드wing 작전(1956년)과 하드택 작전(1958년) 시기에 초점을 맞춰 미국이 태평양에서의 핵실험에 관한 정보를 통제하려 했는지에 대해 밝히는 것으로 대외정보 프로그램의 한계를 제시한다. 그것은 “평화를 위한 원자력”이

대외정보 프로그램으로서 매력을 잃어가는 과정의 시작이었음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이제 제II부에 들어간다. 제5장에서는 아이젠하워 정권기부터 케네디 정권기에 이르러 대외정보 프로그램의 주안점이 보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밀착한 테마(의료나 식량, 전자제품 등)와 비일상적이고 꿈이 있는 테마(유인우주비행)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즉, 대외정보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이 어떻게 “스푸트니크 쇼크”에 의해 전환되었는가를 밝혀내고 있다.

제6장은 “호프호”에 의한 의료 지원 활동의 실태에 대한 해명을 시도한다. 호프호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한 해군의 병원선을 개조한 의료 원조선으로, 호프호를 활용한 의료 지원 활동은 “호프계획”이라 불리며 순수한 민간 자원봉사로 선전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연계한 대외정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계획, 실행된 것이었다. 본 장은 대외정보 프로그램에서 정부와 민간의 경계선이 내포하고 있는 모호함과 “민간 활동”임을 정부가 선전하는 것의 모순을 나타내어 문화냉전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끌어들이는 다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제7장은 유인우주개발에 관한 분석을 시도한다. 1958년 NASA 설립 전후부터 미국 최초의 우주 유인 비행 계획 “머큐리 계획”의 초기가 되는 1961년까지의 시기에 NASA가 USIA와 어떻게 연계하고 있었는지를 분석하여 문화냉전 중 우주개발의 역할을 고찰하려 한다.

이와 같은 과제의 해명을 통해 본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밝혔다. 첫째, 1950년대부터 60년대 초반에 걸쳐 미국의 대외정보 프로그램에서 과학기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과학자, 기술자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 둘째, 대외정보 프로그램과 과학기술 원조는 종종 표리일체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양자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도 많았음을 보인 것. 이를 바탕으로 필자는 본서에서 검토한 시기의 과학기술 원조란 미국으로 하여금 상대국의 충성과 협력을 얻기 위한 단기적인 외교카드가 아닌 대외정보 프로그램으로 연동되는, 혹은 그 일부로 실시되는 장기적인 문화적 침투 정책이었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미국제 원자로나 실험 설비와 같은 “것”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이 아닌 작은 “미국 문화권”이며, 기술 훈련을 통해 지미파(知美派) 과학 엘리트 집단이 양성되는 결과를 낳았다.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가 원조 대상국을 미국 중심의 과학기술 네트워크 하에 안정적으로 두는 것을 의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대외정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 정부나 과학 엘리트들은 소련이나 프랑스 등 미국 이외의 선택지를 검토한 것 외에 미국의 원조를 이용하면서도 독자적인 과학기술을 개발하려고 했다. 이러한 점을 들어 필자는 대외정보 프로그램의 성과가 반드시 미국의 막대한 투자에 상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학생과 미국제 원자료를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는 오랫동안 미국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科學技術知]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결론지었다.

본서는 과학기술이 비정치적이고 자율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그때그때의 요청에 따른 대외정책을 지지하고 있던 미국 과학기술의 한 모습을 조명한다. 이는 과학기술에 얹혀 있는 정치성을 하나씩 벗겨내며 그 내실을 해명하고, 과학기술의 의미에 대해 문화냉전의 맥락에서 다시 파악하는 작업임에 틀림없다.

4. 향후 과제

본서는 과학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문화냉전의 역사적 구조와 메커니즘에 대해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분석을 통해 해명하고, 여러 연구영역의 경계를 넘어 각각에 공헌하는 중요한 연구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더 파고들어야 하는 논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본서를 단서로 한 향후의 과제에 대해 말해 두고 싶다.

첫째, 연속적인 시간 축 속에서 과학기술의 유용성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묻는 것이다. 원래 과학과 기술은 별개의 것이었고,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속성도 달랐다.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과학과 기술이 결합했고, “과학기술”은 군사력 등 국가의 힘의 기반으로 인식됐다. 이러한 결합의 과정과 그 귀결에 주목한다면 문화냉전을 벌이는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인 의미의 국력 증대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대외정보 프로그램에서 과학기술의 유용성을 발견한 것도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러한 유용성은 문화냉전이 “발발”하기 전부터 “총력전 체제”나 “국가 주도의 과학기술진흥”이라는 이름하에 “발견”되어 활용되어 왔다. 이 점을 근거로 한다면 과학기술이 “대외정보 프로그램”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부여받은 것의 의미에 대해 냉전기와 그 이전의 연속적인 시간 축 속에서 파악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둘째, 유럽의 지식에 대한 도전/대항이라는 관점에서 대외정보 프로그램에서의 과학기술의 활용에 대해 묻는 것이다. 본서에서는 미국-아시아 관계 속에서

과학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대외정보 프로그램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미국에 의한 과학기술과 관련 지식의 침투가 고찰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시도는 “발전도상”에 있는 아시아에 대해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확립시킨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유럽, 특히 서유럽의 과학기술과 지식에 대한 도전, 혹은 대항이라는 측면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일까? 냉전기에 미국이 내세워 자랑한 과학기술에는 제2차 세계대전기에 쌓아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 많다. 나치 독일이 개발한 V1 로켓 등은 가장 잘 알려진 케이스 중 하나이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근거로 대외정보 과학기술의 활용에 담긴 미국의 목적과 의도를 다면적으로 밝히고 과학기술에 얽혀 있는 정치성을 더욱 입체적으로 밝혀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문화냉전을 둘러싼 메타내러티브를 간파하고 과학기술의 메타히스토리를 그려내는 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미국의 대외정보 프로그램이 아시아에서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켰는지에 대한 추가 분석을 하는 것이다. 본서는 미국의 대외정보 프로그램을 주된 고찰의 대상으로 하며 아시아의 반응에도 큰 관심을 두고, 미국-아시아의 상호적인 관계성 속에서 “문화냉전”을 파악하며 과학기술의 의미를 묻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아시아의 언어로 기록된 사료의 독해라는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분석해야 할 아시아의 사료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본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남베트남이나 버마의 경우, 당국에서의 공문서 공개는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며, 이들을 활용하여 연구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편, 아시아 중에서도 공문서 공개가 적극 추진되고 있는 곳도 있다. 한국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통해 외교사료관이 정비되어 기본적으로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는 기밀 해제되어 공개되고 있다. 국가기록원과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서도 극히 많은 공문서를 열람할 수 있어 풍부한 연구성과를 낳고 있다. 대만도 공문서 공개에 적극적이며, 국사관이나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당안관에서도 미국의 대외정보 프로그램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사료를 섭렵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중국에서는 공문서 등 1차 사료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나의 경험에 근거하면, 2013년경까지 베이징의 외교당안관이나 상하이시당안관 등은 비교적 공개성이 높아, 사료 조사에 협력적인 공문서관이 몇 개나 존재했다. 하지만 현재 기본적으로 모두 문을 닫고 있어 적어도 외국인이 중국의

공문서, 특히 외교문서를 이용하여 연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중국의 공문서를 활용하는 시대가 다시 도래하면 미국의 대외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 대해서 더욱 깊은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아시아의 사료를 활용함으로써 미국의 사료만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위험을 피하고, 미국의 대외정보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과 아시아의 양방향적인 지식의 흐름을 근거로 한 분석이 가능해 보인다.

“냉전문화”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연 이 책은 앞으로도 쌓여 갈 “문화냉전” 연구의 중요한 도표가 되며, 현시점에서 해당 분야의 최고 도달점에 달한 연구 중 하나인 것에 틀림이 없다. 그것은 과학기술에 착안한 필자의 탁월한 연구 센스와 미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료를 정성껏 발굴하고 수집한 필자의 인내력, 행동력이 결합하여 가능해진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센스는 좀처럼 배워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센스를 몸에 익힐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며,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연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인내력과 행동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강하게 인식시켜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 또한 이 책의 의의로서 특별해 두어야 할 것이다.